

생태/환경

20대 대선을 위한 생태문명 대책

-기독교적 시각에서-

이 정 배
현장아카데미

해를 바꿔 따스한 바람 부는 3월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된다. 지난 대선이 장미대선이었다면 2022년 내년 선거는 진달래 대선이라 불릴 수 있겠다. 조만간 판가름 나겠으나 글을 쓰는 지금 12월 초, 아직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 나라를 운영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지율 편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자 시대정신은 사라지고 저마다 민생과 경제를 외치고 있다. 사람을 먹이고 입히며 삶의 터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기에 역대 어느 선거치고 이런 말 듣지 못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치러 질 이번 대선은 세계적, 문명사적 전환과 맥이 닿아 있기에 좀 더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시대정신과 조우하며 나라의 앞날을 계획하고 비전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1.

주지하듯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로 불리고 있다. OECD 10 개국 안에 포함될 만큼 경제, 문화적 위상이 높아졌지만 화석연료 사용비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세계 4위에 이를 만큼 지구 생태계의 범법자로 낙인찍힌 탓이다. 세계 10위 권 내의 선진국이 되었기에 세계인이 당면한 기후붕괴위기에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책임도 이 나라의 몫이 되었다.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린 기후 당사자국 회의에서 발표한 대통령의 탄소감

축 공약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목표는 세웠으나 이를 방책이 투명치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까닭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가 내놓은 방책에 대해 시민, 종교,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를 방증한다. 대기업 경영자들의 자기 식의 우려도 표명되었다하니 가관이다. 기후위기와 경제, 토끼 귀와도 같은 이 둘을 함께 부여잡고 나라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만큼 20대 대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하다. 지금껏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명제 하에 그린 뉴딜이란 말이 회자되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쟁하듯 활성화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10%에 달했다 하니 그간 장족의 발전을 했다. 향후 10여년 내에 이 비율을 40%까지 높인다 하니 그 추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 모두가 의심한다. 이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풍력, 태양광 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간 정부가 산과 바다. 농촌 들판을 파괴한 이율배반적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재생 에너지를 갖고 이전처럼 성장만을 목적한다면 지구 생태계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GDP 위주의 경제정책, 즉 매년 3~4%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금껏 방식은 20년 이내에 지구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재생에너지 일지라도 거둬 그 수요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기에 자연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그 기초 원료들 다수가 남반구에서 추출되는 것이기에 공유지 약탈은 가속화 될 수 있다.

2

“모든 문명은 붕괴한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다”(파르칭거)란 말이 있다. 공유지 약탈에 근거한 목화 자본주의 문명이 귀담아 들을 이야기이다. << 2050 거주 불가능한 지구 >>란 책도 두루 읽히고 있다.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사고방식, 생활태도가 바꾸지 않으면 붕괴 현실을 피할 수 없다. 물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이 현실은 더디 찾아오겠지만 곧 그들 역시 희생자가 될 것이다. 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유지키 위해 환경학자들은 향후 10년, 곧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이천년도 대비 40% 줄일 것을 세계인들에게 요청했다. 이미 1.2 도가 상승하여 0.3도 여분 밖에 없다는 소리도 들린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외쳐야 할 때란 것이다. 바로 이런 긴급한 현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수차례 변종으로 2억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5백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남아공 변종으로 코로나 이후를 기대했으나 ‘위드 코로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로 해결될 사안 그 이상인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K-방역의 성공에 만족할 때가 결코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명의 교정자’로서 이 땅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서식지, 공유지를 빼앗긴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의지를 인간 몸을 이용하여 확산시키는 중이다. 우리가 생태문명의 전환을 말하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 차원에서이다. 자멸을 걱정 할 만큼 자본주의 폐해가 가중된 현실에서 정치가 할 수 없었던 체제전환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 시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동구권 철학자 지적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철학적으로 사유할 것을 요청했고 필자는 기독교를 향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주지하듯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 가지를 세상에 여실히 폭로했다. 인간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 한 것인지,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붕괴 직전이란 사실을 말이다. 조만간 식량위기 상황도 도래할 수 있을 듯싶다. 이를 새삼 고지 해 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이를 그가 준 선물(?)로 이해해하면 좋겠다. 인류가 쌓아 온 바벨탑 같은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시연한 까닭이다. 지금은 인류 역사에 있어 비상사태이자, 전시체제라 봐도 좋을 것이다. 예전과 같은 안일한 태도로 경제를 앞세워 정권 획득을 목적 삼을 때가 아니란 것이다. 이는 물론 한 나라, 자국의 힘만 갖고 해결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저마다 상대방 탓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껏 이들 두 나라가 지구 공유지를 약탈하여 쌓은 부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양대 이념을 대표하는 이들 문명은 앞선 말대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 강소국이 되었으니 차제에 한국은 문명전환, 체제변화의 선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글, 한식, 한복, 한옥을 비롯하여 영화, 음악 등 K-문화(Culture) 일체를 주목하는 현실에서 지구 생태계를 구하고 평등한 사회를 일궈 지혜를 찾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K-Christianity, 곧 토착화된 기독교의 역할도 생각할 수 있겠다. 과연 이런 전제 속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기독교는 특별히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겠는가?

3.

시편 104편은 생태학적 경영자로서의 하느님을 노래했다. 저마다 먹이를 찾는 생명체들 일체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사려 깊게 당신 지은 세상을 경영하는 이가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굶주린 사자의 배를 채우시는 이도 하느님이였다. 어떤 종도 사라지지 않고 서로가 공존하는 세상을 유지, 존속시키면서 말이다. 하지만 목하 세상은 인간마저 멸종에 이를 만큼 균형을 잃었다. 자본주의가 자신들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인간 간, 인간/자연 간 형평성이 깨진 것이다. 이에 기독교는 무엇보다 생태문명의 길로서 **‘탈성장(Degrowth)담론’**을 제시해야 옳다. GDP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양하자는 뜻이다.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자는 세계인들의 열망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이것은 역성장과 변별될 수 있다. 주지하듯 지금껏 자본주의는 자연, 곧 지구공유지를 착취, 약탈하여 소수에게 이익을 돌려주었다. 소위 낙수효과란 말조차 무색하게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하

여 기후붕괴와 세계 내 불평등은 동전의 양면 되어 함께 굴러갔다. 현재의 불평등지수가 프랑스 대혁명 시기보다 높다는 통계가 제시될 만큼 그렇게. 국가들마다 매년 3-4%의 경제성장을 당연시 하고 자신들 미래를 계획해 왔다. 이럴 경우 20년도 채 되지 않아 지구 총생산량은 두 배로 증가할 것인 바, 기후위기 역시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성장할수록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심화되어온 현실에 더 이상 눈감을 수 없는 이유이다.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인 바, 농토를 파괴시켜 생산량이 커질수록 굶주리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는 기현상이 세계의 실상이다. 말했듯이 탈성장이 역성장과 다른 것은 그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까닭이다. 탈성장은 그간 소외된 존재들의 **돌봄 가치**를 우선한다. 그것이 자연이든 사람, 혹은 국가이든지 간에 성장의 희생양 된 존재들에 관심이 있다.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자연 그 자체는 모두를 위해 더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까닭이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후술하겠으나 기본소득이 이에 해당 된다-역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창조성을 증가시켜 질적으로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본주의적 욕망 대신 최소한의 물질로 살아가는 정신적 존재들, 소위 **포스트 휴먼**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탈성장 담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유지의 회복’**이 요구된다. 공유지라 함은 일차적으로 자연이겠고 확대하면 문화, 지식 공유지 일체를 뜻할 수 있다. 지금껏 자본주의는 공유지를 약탈하여 부를 사사 화했다. 이점에서 기독교는 선악과 사건을 종래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하느님 것’(시편 24편)이란 전제 하에 원죄의 본원 처로 알려진 이것을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약탈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사적으로 취한 것을 다시 공적으로, 하느님 것으로 되돌리는 행위를 구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에게 빼앗긴 공유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생태문명을 향한 첫 과제가 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연을 만들지 않았고 인류가 쌓은 문화, 지식, 정보 역시 독점할 주인이 있을 수 없다. 인류는 그것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자연이라는 최상의 것을 오로지 은총으로 얻었을 뿐이다. 이로써 정부는 포스코 등 공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을 향한 공유지 약탈의 실상, 즉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측정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만 한다. 지금껏 통용된 국가 간 탄소 발생량을 거래하는 차원과 단계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탄소 40%를 줄이겠다는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강릉, 삼척 지역에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국가 기금으로 석유 산업 등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큰 해외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연유로 유럽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거둬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등도 켜진 상태이다. 한마디로 약탈된 지구 공유지

회복을 위해 **탄소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적게 자연을 소비하고 그 것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소득세, 부가세 중심의 **조세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이렇듯 체제전환, 나아가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작금의 정부기구 및 조직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부, 기획 재정부는 물론 국토부, 산자부의 눈치를 보여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환경부는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크고 많다.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 역할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솔하게 경험했듯이 종교, 시민, 노동 단체들과 기업 사이에서 적당한 노선을 택해 타협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명약관하 한 탓이다. 하여 차기 정부는 환경부와 기재부를 통폐합하여 가칭 **에너지 경제부**를 신설하여 생태학적 경영자의 위치에서 탄소제로 사회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세제 개편을 통한 공유지 회복을 위해 기업을 감시하고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며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확대개편 되길 제안하는 것이다. 부총리 산하의 이 기구가 비대한 권력기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럴 경우 **에너지부**를 독립시켜 기재부와 동일 위상을 갖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재생 에너지산업이 미래의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제인과 환경전문가들이 한 공간 안에서 국가 전체를 조망하는 일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재생 에너지 문제로 시각을 좁혀 볼 것이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불허되는 세계적 상황에서 태양력, 풍력, 지력 등의 에너지 자원이 대단으로 떠올랐다.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라 여겨 이를 고집하는 세력들도 항존 한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건설 중인 것은 물론 설계하고 있는 원전까지 포함하여 국민의견을 통해 수용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비용 때문에 지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설계중인 것 까지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반생태적, 반신학적인 까닭에 원자력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일은 줄여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수록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나 목하 이 사업은 산, 바다, 농토, 갯벌 등을 파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돈을 갖고 마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경우도 허다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필요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을 원칙 삼아야 한다. 송전탑을 사용하여 도시까지 전력을 송출하는 일도 지양되어야 옳다. 농어촌 및 산촌의 사

람과 자연을 희생시켜 한국전력과 대기업 나아가 도시인들을 위한 일인 까닭이다. **송전탑 정책**은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생긴 토지 강제수용법에 의해 생긴 것으로 이제는 그 칠 때가 되었다. 서울 도심지역의 건축물(지붕, 유리창 등), 주차장, 각 가정, 공원, 고속도로변을 활용하면 핵발전소 5~6개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단지 사업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농어촌, 산촌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청정에너지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생 에너지비율이 총량대비 10%에 이를 만큼 급성장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 산업자체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고 이윤 추구를 목적했기에 성공적이라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이 비율을 40%까지 올린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가 관리, 감독하여 사후 처리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에너지부의 신설**은 필요 막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갖고서 더 많은 것을 생산, 성장하려는 욕구가 멈춰져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또한 자연에서 얻는 원초적 재료가 있어야 하고 수명 다할 폐기처분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인 바, GDP 향상만을 목적 할 경우 생각만큼 체제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없다.

7.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 주제를 부언할 차례가 되었다. 토론될 여지가 많은 사안으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주지하듯 기본소득은 공유지 회복과 밀접하게 연류 되어 있고 산업체제 개편 및 생태문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주제이다. 화석문명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직장에서 내몰리거나 직종 변화를 강요받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기에 디지털 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체제전환 차원에서 내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제도이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와 차원을 달리한다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은 수혜의 차원이 아니라 공유지 사용에 대한 권리에 해당되는 까닭이다. 누구도 공유지를 독점할 수 없고 단지 사용권만 있을 뿐이다. 공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것이기에 주체적이고 창조적 삶이 가능하다. 물론 시행 초기기에 본 취지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범위를 좁혀서라도 실험할 주제이다. 예컨대 지역으로 내려가 삶을 영위할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그 곳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 수 있다. **소농 중심**의 농어촌 문화를 이룰 뿐 아니라 **지역 순환운동의 활동가**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만 하는 도시 문화를 넘어 지역화를 통해 생태적이고 체제 전환적 의미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산, 소비, 가공 나아가 쓰레기 처리까지 지

역적으로 해결하는 지역순환운동은 도시를 구할 수 있고 문명을 치유할 수 있는 오래된 지혜라 말할 수 있다. 이들에게 농어촌, 산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작물지배 및 어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인구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순환활동가를 배출하는 일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길 제안한다. **식량 주권, 종자 주권**을 지키는 일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한 일이다.

8.

주지하듯 금번 코로나 사태는 자신들 서식지를 빼앗긴 인간을 향한 바이러스의 공격이라 봐도 좋겠다. 야생동물을 포획, 거래하는 인간의 동물권 박탈의 결과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인류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밀식 축산으로 인해 동물들을 혹사해 왔다. 달걀 생산을 위해 닭들 부리를 잘랐고 부화된 수컷 병아리를 산채로 죽였으며 A4용지 한 장 공간에서 사육한 것이다. 생명을 기계화시킨 인간들은 조류독감이라도 발생하면 수백만 마리를 산채로 땅에 묻었다. 어디 닭뿐이었겠는가? 최근 구제역 파동에서 보듯 덩치 큰 소들도 그렇게 생매장 되었고 아프리카 열병으로 돼지 역시 그렇게 죽어야 했다. 이 모두는 이익확대를 위해 동물을 밀식 지배한 결과였다. 한마디로 동물권 이해 결핍 탓이다. 최근 애완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개고기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곤 있으나 향차 동물 권역 전체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 자본화된 밀식 지배를 포기하는 법도 발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육하다 전염병 돌면 땅에 묻혀 살육당하는 짐승들, 그들 피가 부러진고 시체가 썩은 땅이 인간에게 좋은 것을 되돌려 줄 리 없다. 거대한 농지를 태양광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경우 이 땅을 찾는 못 조류의 서식치의 미래도 없고 그들이 옮길 전염병도 이전 보다크고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도살장에서 짐승을 죽여 고기를 취하는 방식도 동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인간에게 유익을 더할 수 있다. 어느 동물도 밀식재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고통을 덜 하는 방식으로 죽을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재차 자본화된 밀식재배 금지, 고통을 가중시키는 도살장 문화를 쇠신할 것을 요청한다. 대홍수 이후 노아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하느님은 인류의 더 큰 축복을 위해 두 가지를 약속하라 했다.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 것”과 “동물(자연)을 피(새명)채 탐하자 말 것”이 그것이다. 노아와 맺은 보편적 계약은 원역사의 이야기로서 신화이지만 오늘날 재현되어야 할 역사이기도 하다. **동물권을 보장하라!**

9.

남과 북 70년의 분단 역시 생태문명의 전환 속에서 해결될 주제이다. 지금껏 이념을 앞

세워 지정학적 정치의 희생 양되었던 한반도는 **생명권 정치학** 차원에서 다시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극 분단선에 갇힐 수 없고 생명 종의 분포가 남북에 한정될 만은 없을 것이다. 산과 강을 공유한 남과 북은 공유지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상생을 위한 **공유경제** 체제를 확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생태문명은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으로 하여금 종래와는 다른 체제를 요구하게 될 터이니 말이다. 기후붕괴로 야기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불평등의 심각성을 고지했다. 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 번도 실험치 못했던 재난 기본소득을 무리없이 수차례나 성사시켰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히 그리했다. 대 재난을 경험한 인류에게 이념은 더 이상 본질적 가치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느 한 지역이 무너지면 시간차만 있을 뿐 예외지역은 있을 수 없다. 향차 생명 종의 분포에 따라 남북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지도 역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기후변동에 따른 먹거리 변화, 생산물의 변동에 남북이 함께 대처할 일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이념을 넘어 공존하는 길을 -단순히 혈연이나 경제적 차원을 넘어- **생태적 운명 공동체**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명전환 차원에서 남과 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거시적 통일담론을 만들 시점이다. 향차 남북만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동북아의 미래**를 생태적 시각에서 구상할 책임이 통일부의 몫이다.

10.

마지막으로 생태문명 전환은 경제, 과학기술, 정치 법제화만 갖고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인간 의식이 기후붕괴 현실에 맞게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크게 달라져야 가능할 것이다. 체제 전환을 위해 종교가 필요한 이유이다. 불행하게도 종교는 예외 없이 자본주의 욕망 충족을 위한 방편으로 존재해왔다. 개교회 중심의 개신교는 그 존재 양식 자체가 자본주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종교도 자신들 존재근거였던 기후, 환경이 파괴된 현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거듭 생기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고쳐 생각할 때가 되었다. 창시자들 정신과 달리 자신들 조직을 위해 사람을 필요로 했던 이전과 달리 사람과 자연을 위한 종교이자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들 전통과 문화 그리고 경전 속에 담긴 생태적 지혜, 이익과 욕망에 휘둘린 인간이 아니라 평등과 배움의 가르침을 담은 지혜를 맘껏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자본교로 변질된 모든 종교들, 변하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세상을 더 빨리 소멸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종전처럼 소극적, 방어적, 체제 안주적 행보를 벗어나서 종교들로 하여금 생태문명, 탈 성장담론, 동물 권, 공유지회복, 기본소득, 에너지 절약 등의 이슈를 활발하게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종교적가치를 갖고 시민 사회와 소통할 수

생태담론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저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으나 공유지 회복이라는 동일 결론을 도출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생태문명을 위한 종교의 역할**, 이런 주제를 펼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우리 전통 속에 담긴 생태적 지혜도 오래된 지혜의 차원에서 맘껏 길어 올릴 일이다. 생태문명을 위한 종교 간의 대화가 힘껏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기후붕괴를 치유할 수 있는 **K-Religions**를 상상한다.